병원활성화를 위한 의료정책방향

글 · 최 원 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병원은 고도의 지식서비스 기반 산업이자 노동집약산업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병원계는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그 능력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병원계는 국민들이 선진국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산업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국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새 정부는 과거 규제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의 건강보장체계는 그 기본 틀을 확고히 유지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의료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담당하여야하는 응급의료, 혈액관리, 의료취약계층 보호 등은 과거보다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주요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국민 건강보장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 · 발전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 당연지정제 원칙을 유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국민의 기본적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응급의료, 혈액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3)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완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율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의료서비스 질적수준 제고, 환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4) 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산업 등 보건의료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보건의료 R&D 확충 및 관리방식 개선,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더불어 병원계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조화롭고 발전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보건의료의 미래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KHA